

육 계

마음을 모으고 결속력을 키우자



장 재 성 육계분과위원장

정해년(丁亥年)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해 계획한 육계사업 현안들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데, 또 한해의 계획을 세우고 한해를 설계해야 하는 심정 안타깝고 민망할 따름입니다.

전국의 육계사육농가 여러분! 육계산업의 장래를 기약할 만큼 중요한 육계의무자조금사업, 계약사육농가들이 족쇄처럼 여기고 있는 불공정한 위탁사육계약서 개선 문제, 항상 불안정한 육계시장의 수급 조절과 농가의 소망인 건강한 병아리 구입의 희망을 안겨줄 종계DB 구축사업과 시행, 태풍처럼 해마다 전국을 뒤흔드는 AI발생의 대책 및 사후 대처방안 등 모두가 어두운 미로속을 헤매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일까? 올해는 답을 꼭 찾아봅시다.

먼저 생산농가 조직의 이원화와 농가들의 무관

심과 결집력 부족입니다. 육계산업에는 양계협회와 계육협회가 따로 일수가 없습니다. 양대 협회가 서로 자기 앞만 생각한다면 반대로 주무부서는 한없이 편해질 것이고 자기들 편의대로 정책을 이끌어가고 아무도 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육계업은 양계협회 육계분과 소속의 전국 육계농가와 계육협회의 육계산업 경영 마인드가 하나로 일치하여 서로의 불신을 털어내고 신뢰를 바탕으로 힘을 모을 때만이 많은 육계산업의 현안들을 순조롭게 풀어낼 것이라 믿습니다.

또 하나 전국 육계 사육농가 여러분은 지방 자치시대에 맞는 지역지부 운영과 결속력을 다지고 소사육, 돼지사육 농가에 뒤지는 지방예산 확보와 광역단체예산 확보에 힘쓰며 다가올 FTA 등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현실성 있는 대안

과 함께 각지부의 다양한 의견들을 양계협회로 모아 주무부처를 통해 해결해 나갈 때, 육계산업의 장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4,000여 육계사육농가가 다른 직종에 비해 많은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전국 각지역 대의원 선출을 통해 농가들의 구심점이 생긴 것을 계기로 눈앞에 작은 것에 매이지 말고 긴 안목으로 우리 산업의 앞길을 생각할 때입니다. 원하던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육계산업은 계열사들의 계약사육 형태로 가고 있으며 그렇게 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많은 갈등과 불신을 풀어야하는 과제 또한 큼니다. 계열사들은 농가를 진정한 사업 파트너로 인식하고 인권적인 차원에서 배려와 대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순수한 사육농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함께 고민할 때 지난해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소된 불공정거래 범칙금은 물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급할 때만 사육농가들의 서명을 받아 농가들의 뜻인 척 써먹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회사를 위한 농가 협의회는 이제 더 이상 육계사육농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계육협회 계열사들은 우리 육계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순수한 농가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계열사 농가 협의회와 양계 협회 육계분과 위원회가 함께 우리 육계산업에 대안을 내고 대정부 대책에 맞설 때 우리의 바람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국의 육계사육농가 여러분! 사육농가의 불만이 어디 한 두 가지 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농가들의 문제 또한 적지 않음을 인정할 때입니다. 우리 농가들은 마음을 모으고 결속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살아가다가 어려운 사안만 발생하면 양계협

회와 직원들만 타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육계사육농가의 유일한 조직인 양계협회 육계 분과를 우리가 키우고 다듬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힘을 길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여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접근하여 풀어나가는 지혜를 배우아야 합니다.

AI 피해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절실

올해는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AI발생에 대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처방안과 소비 홍보 및 사후 생계대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AI발생과 함께 지나친 언론보도는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농가는 생산비의 반도 못 건지는 닭을 비싼 사료만 축내며 출하할 곳이 없이 전전긍긍하는데, 각 언론사들은 경쟁적으로 고위 관리분들을 내세운 의례적인 관 주도형 소비홍보 행사는 이제 지양되어야 합니다.

생산자단체가 자기들의 생존권차원에서 절실하게 닭고기업체 및 외식업체들과 함께 성의있는 방법으로 주 소비층인 서민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홍보방법을 바꾸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당국과 자금수급안정위원회는 예산 및 지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피해지역, 피해농가를 위주로 한 보상 대책도 현실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더 큰 피해는 AI발생과 소비위축으로 판로가 막힌 농가들이 사육한 닭을 정부는 빠른 수매 비축과 함께 AI지역 밖 농가들의 생산비 보장 노력은 어려운 농가를 돕는 것이며 실의에 빠진 농가들의 의욕을 북돋워 빠른 시일내에 AI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양계**